

OECD, 농정개혁 의제 발표

OECD 국가들은 최근 농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제(Positive Reform Agenda)에 동의하였다. 이 아젠다의 주요 내용은 농정의 목적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이 아름다운 농촌경관이나 환경적 이익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간접적 정책을 통해 농업의 산출물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관한 보조정책들을 제공한다. 반대로 환경파괴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규제를 행할 수 있다.

농가의 소득이 낮은 곳에서는 가난한 농가들 사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더 큰 농가와 지주들을 포괄하는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정부프로그램의 비용효과를 높여주고 국제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문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개혁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폭넓은 기회를 만들려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좀 더 명쾌하게 반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요약은 ‘OECD 국가들의 농업정책 : 적극적 개혁의제(Positive Reform Agenda)’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1. OECD 국가들은 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OECD 국가들은 21세기에 농업 정책이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1987년 OECD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동의했던 개혁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의 원칙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재확인되어 왔다. 이 원칙의 주요 사항은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무역 보호를 초래하는 보조 정책들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개혁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다. 2002년 농민들에게 제공된 보조수준(생산자보조추정, PSE)은 US 2,35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OECD 의 총 농가가 수령한 금액 중 31%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86년과 1988년의 평균치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불만한 수치이다. 산출물에 기초한 보조와 투입물에 대한 장려금은 1986년에서 88년까지 농민에게 지급된 금액 중 90%를 차지하던 것이 2002년 76%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국가 사이에서 개혁을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OECD 국가들은 적극적 개혁의제(Positive Reform Agenda)에 합의하였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개혁을 하면,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타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책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비효율적이었다. 최근 정책은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농가 소득에 관한 것과 다른 하나는 공공재 생산에 관한 것이다.

농가소득에 대해서 OECD 국가의 농가가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의 가계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사실 없다. 그래서 전체

농업 부문의 소득을 지지할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정책의 약 3분의 2가 모든 생산자를 지지하는 전부문적 정책으로 높은 소득의 생산자도 지지하고 있다.

몇몇 농가들에게 주어지는 소득보조가 목적인 곳은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중 약 4분의 1만이 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은 산출물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투입재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유발시켜 증가된 정책 수령액의 많은 부분이 투입재 공급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는 토지에 자본으로 축적되어버린다. 좀 더 일반인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보조금 중 대부분이 소비자와 납세자가 지지해준 금액이 농가소득 증대로는 이어지는 데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모습은 모든 농업활동에서 생산과 분리되고 (decoupled), 농사를 짓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게 똑같은 자격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직접소득지불제(direct income payments)이다. 현실적으로, 농민이라는 조건하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불제는 산출 증량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런 지불제에서 생산증가에 대한 유인 동기를 제거한다면, 정책 수령액은 땅이나 투입재와 같은 다른 자원의 소유자에게 새어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원 소유자들은 생산증량과 관련하여서 그들 자원의 값을 높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소득지불제는 정책입안자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을 직접 목표로 삼고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이다. OECD에서는 OECD의 대부분 국가들의 농업부문에 이러한 정책이 전체 농가에 소액으로만 적용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많은 자금이 소득이 낮은 농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농가에게 지불되면서 정책적 총액은 절약된다는 것이다.

농업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또다른 논리는 농업이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최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종종 무시되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간접적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제공되지 못하였다면, 이런 기능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다른 정책을 통해서 실행되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을까 하는 질문이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결과를 직접 목표로 삼지 않은 최근 정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금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것은 특히 환경과 같은 최근 농업 정책이 해악일 수도,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좀 더 적은 비용이 들고, 이런 정책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도록 계획한 정책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할 것이다. 아마도 소규모의 농기업이 대기업보다도, 예를 들면 경관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책은 소득 보조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준다.

이런 원칙에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농업생산규모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러한 기능에 대한 직접 정책제공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사항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밝혀진 바도 반박당한 바도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최근 보조정책의 많은 부분이 보호무역(trade protection)을 필연적으로 동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정책의 비효율성에 대한 순수 비용을 증대시키고, 다른 국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

를 낳았다. 그리고 이것은 불합리한 순환을 낳았는데, 결국 다른 나라도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보호무역제도를 계속 옹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무역 논쟁은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부문간 국제무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2. 국내개혁이 어떻게 무역 자유화와 연관될까?

농업에서 ‘생산과 분리된’ 국내 정책의 채택은 모든 무역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물론 이것은 동식물 검역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보호 문제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개입 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정책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자국이 수입할 수 있는 가격 수준 이상으로 국내가격을 유지하려는 지지정책은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수반한다. 마찬가지로 독립형 무역정책도 국내 보조정책이 유지될 때에만 기제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극단적으로 한 국가가 순수 수입국에서 잉여농산물만을 남기는 국가로 변한다면, 보조정책 중에서 수출보조금정책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종종 무역정책은 국내정책의 부산물일 때가 있다.

보호무역과 생산물보조정책에서 생산과 분리된 직접보조정책으로 변하는 것은 무역왜곡효과를 줄여주지만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특정 농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생산 증량에 유인동기를 제공하고, 국가간 전문화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런 무역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 형태의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한없는 가격지지정책은 생산에 대한 직접적 유인을 제공하고(소비는 급감한다)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지면적과 관련한 지불제의 경우에는 생산면적을 늘리는 데에는 유인동기를 제공하지만, 면적당 증

가하는 산출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영향력은 적은 편이다. 직접지불제 역시 그 영향은 적은 편이다.

보호무역정책은 비효율적인 국내정책에 의한 손실을 증첩시킨다. 이런 국가들은 특화와 비교우위로 인해 생기는 이득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보조금의 상쇄 없이는 농민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손실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성격을 지닌다. 농업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국제적 이익은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정되며, OECD 국가들도 이를 통해 다자간이든 단독적이든 자유화를 이루면 이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박한 무역자유화를 유보시키려는 ‘협상에서의 양보(bargaining chip)’ 수단으로 보호무역을 바라보면, 개방된 시장에서의 각자 이익과 집단 이익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업생산성 증가가 수요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농동을 포함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자원들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보호무역도 이러한 생산자원의 추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으며, 시장조정에 대한 부담을 타국에 부과할 뿐이다.

3. 국제무역기구 협상이 제공하는 기회란 무엇인가?

OECD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은 농업을 국제무역규범 아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분수령이 되었다고는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부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보조와 보호정책이 남아있다. 최근 WTO 협상은 개혁을 강화하면서 UR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개혁은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의 주요 사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장접근의 경우, UR의 큰 성과로 관세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그들의 관세를 높은 수준에서 묶어두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대부분인 60%의 국가에서 적어도 200% 관세가 관세최고점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의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요구를 시행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아직 MMA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할당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OECD 국가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OECD 국가에서 관세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줄어든다면 더욱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개도국이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려면,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에는 열악한 재정에서부터 열악한 기반시설과 운송 시설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수출보조에 있어서 UR에서는 감소 의무를 이끌어 낸 것이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삭감은 넓은 범위에서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개도국이 수출보조를 통해 이제까지 손상시켜온 순이익 부분에서 더욱 그러하다.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수출보조는 순이익에 가장 손상을 많이 입히는 정책도구이다. 이런 정책은 수출국간에 ‘바닥으로 치닫는 경쟁’을 일으키고, 이런 보조를 해줄수 없는 나라에게 손해를 입힌다. 왜냐하면 수출보조는 세계 가격이 낮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가격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입가격을 낮춤으로써 몇몇 개도국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잠재적으로 지역시장마저 해칠 위험성을 지닌다.

국내보조의 경우 역시 UR에서 감축의무를 이끌어냈다. OECD 국가들에게 있어서 생산과 분리된 보조정책으로의 변화는 이미 세계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증가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은 여전히 중요하고, 보조수준을 줄이

는 일은 더욱 영향력 있는 중요 사안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조수준이 높고 농민이 농업부문에 기초한 여러 형태의 보조를 받는다는 가정을 고려한다면 국내보조의 영향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 전체 후생은 증가할 지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자유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몇몇 국가들은 농업무역 자유화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수출업자의 경우 그들의 특혜가 사라지면서 자신들의 이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순수 수입업자의 경우 그들의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도 다부문간 합의에 의해서 이익을 볼 것이고,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 손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유무역 하에서 특화를 시키는 도전을 해볼 것이다. 국가들 중에서는 승자와 예전에는 보호무역에서 이익을 얻었던 패자가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최선의 접근 방법은 모든 개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무역개혁은 국내의 비효율적인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요소이다. 특히 시장접근을 향상시키는(관세 감축) 데에 관한 의무사항과 수출보조 감축은 가격지지정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리고 또한 생산과 연관되지 않고, 무역왜곡적이지 않은 직접적인 보조정책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준다. 국내개혁에 있어서도 국경조치의 감소는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준다.

4. 적극적 개혁의제란 무엇인가?

적극적 개혁의제(Positive Reform Agenda)란 OECD 정부들이 대안적인 농업정책 선택을 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들이 정책목적을 강

화하고 자국내외에서 생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들을 없애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은 이 의제의 주요 원칙이다.

첫 번째 요구는 정부들은 그들이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목적은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정의하여서, 대안적 접근들의 비용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책 입안의 투명성 제고와 개혁을 방해하는 정책적 장애물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OECD 국가들이 언급하는 농업 정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농가소득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경, 농촌 어메니티 제공, 자연환경 보존, 식량안전성, 식량안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항에 관련된 것이다. 각 경우마다 시장경제만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적극적 개혁의제는 정책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들이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농업소득의 경우, 생산과 분리된 직접소득지불제가 농업 전부분에 걸쳐 시장개입하는 가격지지정책과 같은 제도보다 순수입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이다. 마찬가지로 농업 활동에 있어서 비용과 이득을 따져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오염과 같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곳은 비용을 부과하고, 아름다운 시골경관과 같이 시장경제만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지불을 해주는 것이다.

OECD 국가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은 오랫동안 잠재적 이익이 있다고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여러 정책과 대안의 결과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이러한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극적 개혁의제는 현재보다 국내 정책의 국내외적인 부정적 효과를 피하는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목적을 만족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정책들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전반적인 보조수준에 대한 감축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가격지지와 같은 정책도구를 좀 더 집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비단 효율성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납세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해로운 수입장벽과 수출 보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래에 나오는 3가지 예시는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지를 보여준다.

5. 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전년도에 이어서 적절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OECD 많은 국가의 오랜 정책 목적이었다. 농업부문에서 소득문제가 있다는 확증은 없지만, 몇몇 OECD 국가의 농가는 구조적으로 저소득에 고생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은 이런 저소득의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다. 몇몇 경우에서 숙련교육을 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농가이윤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경제개발을 통하여서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적절한 대책일 것이다. 농가의 저소득을 막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농가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해야 한다. 농가는 또한 이런 정책조정에서 취급되지 않는 기상조건 악화나 동식물질병과 같은 위험은 감소해야만 한다. 정부는 선물시장이나 농가소득에 대한 보험계획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이러한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랄 수 있다.

‘지역적 재화’에 대한 후생 또한 광범위한 정책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 OECD 지역에 걸쳐서 농업은 더 이상 농촌지역의 경제 활동의 주요 요소가 아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외도 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여

전히 농업이 고용과 소득의 주요 원천이다. 동시에 농업정책은 더 이상 농촌정책과 같은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이 효율적인 농촌정책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효율적인 정책활동은 특정 장소와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몇몇 농촌과 외곽 지역에는 구조적으로 편향된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농촌 지역은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물리적 기반시설과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손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외곽 지역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몇몇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키는 동기 제공, 중소기업 창업 유도, (모험적인 자본 투자나 기업 훈련, 자문서비스 등과 같은) 위험 부담에 대한 유인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농산물프로그램보다는 지역적으로 다부문간 유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그러나 최근 보조의 대부분은 생산량과 연관되어, 생산자가 생산을 집약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에서 그들의 생산영역을 늘리도록 조장한다. 최근 농업·환경에 대해 여러 시사점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농업에 보조하는 총액의 4% 이하가 환경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활동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불을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시행한다. 이 두가지 경우의 정책은 전통적으로 생산을 증가시켜온 정책을 억제시킬 때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타산업 부문에서 정책적 선택사항을 찾

는 것도 적절한 행동이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환경정책은 농업의 특정 정책과 연관될 수 있고, 두 부문에서 정책을 연계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OECD의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은 적극적 개혁의제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농식품 공급자 중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약간의 혼란과 조정이 필요하다. 개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러한 조정정책을 인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몇몇 경우에는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농가의 규모나 경영형태를 바꾸고 농업부문 안에 남아서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가 많은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혁은 사회경제프로그램이라는 배경 아래에서 시행 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적 정책접근의 예들은 예시일 뿐 절대 정답은 아니다. 혼합 정책의 시행은 각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고, 개혁의 진행과정도 각 경우마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개혁의 합리성에 기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다른 부문의 개혁과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농정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명확해야만 하고, 이런 개혁에 대한 제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 실현되고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빠르다는 것이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